

IUPUI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2 세계 기부환경 지수 : 한국

전문가 : 아름다운재단 / 김성주(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요

필란트로피 조직의 법적 형태 : 연합체, 협동조합, 기업, 사회

필란트로피 조직이 다루는 5가지 주요 이슈 : 예술문화, 사회복지, 건강과 의료, 교육, 청소년
과 가족

조직 설립 평균 소요시간 : 0-30일

조직 설립을 위한 평균 비용 : 0원

관할 부처 : 중앙/지방 정부

필란트로피 조직 (Philanthropic Organization:PO) 설립을 위한 비용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비용이 필요한데 10만원~40만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점수

	운영 용이성 Ease of Operating	세제혜택 Tax Incentives	해외 기부 Cross-Border Philanthropic Flows	정치 환경 Political Environment	경제 환경 Economic Environment	사회문화 환경 Socio-Cultural Environment	전체 평균 Overall
2022	4.47	4.10	4.25	3.85	3.00	4.00	3.94
2018	4.67	4.40	4.20	4.10	N.A.	4.50	4.37

Sourc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2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 필란트로피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맥락에 따라 원문 그대로인 필란트로피, 또는 PO, 비영리조직, 자선단체 등으로 번역하였음.

1. PO의 설립/운영/해산

Q1. 개인이 조직을 설립하기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 4.0

한국에서 PO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PO는 정부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만 법적 및 정부 편익(예: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법인이 기부자들에게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인가한 비영리단체만이 증여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익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사진의 절반 이상이 한국 시민이어야 한다. PO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할 때, 협회나 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이 있다. 협회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200만원~500만원, 재단의 경우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설립 시,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최소 자산 기준이 상이하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로 설립 후 인증을 받는 요건이 필요하다. 영리 조직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2. PO는 어느 정도 정부 관여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 4.0

법에는 이사회, 총회, 내규, 감사 등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이 있지만 PO는 조직의 내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유가 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의 상호작용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능력에도 제약이나 제한이 없다. 다만 PO는 행정 및 모금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O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내정자 중에서 이사회의 4분의 1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PO가 일반인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회원 및 주체를 위해 확인된 이해관계자가 아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PO가 지정되면 총지출의 80% 이상을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Q3. PO가 해산하는 데 정부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나? 4.8

PO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인 PO는 위원 3, 4명이 해산을 요청한 후 자발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PO가 해산을 결정하면 모든 채무가 상환된 후 남은 자산은 해당 조직의 요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한 PO에 해당 금액을 이양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오남용, 비윤리적 행위, 기타 위반을 이유로 PO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비자발적 해산을 명령하더라도 PO는 법원에 해산 명령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38호는 "법인이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PO의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세제

Q4. 기부를 하는데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4.0

개인과 기업 기부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 PO에 대한 자선기부 기록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할 수 있어 세제혜택을 받는 절차도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간편하다. 다만 자선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소 제한적이다. 개인 증여의 경우,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개인 기부자는 전체 소득의 30%까지 자선 기부를 할 때 전액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 고용, 기부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자선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계산하는 공식은 복잡하다. 기업 기부의 경우, 영업이익 총액과 기부 단체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기업은 기부처에 따라 총 영업이익의 10%, 또는 50%까지 자선기부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선 기부에 대한 이러한 규제와 제한은 한국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선 기부를 다소 제한한다.

Q5. PO가 기부를 받기에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4.2

비과세 지위를 받는 과정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PO는 재산세 비과세, 법인세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PO가 주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할 경우 '무관한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PO의 세금신고와 관련해 2020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다. 모든 법인 PO(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는 2020년부터 국세청에 연간 전체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이나 기부금 총액 20억원 이상의 PO만 신고했으나 현재는 자산규모와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PO에게 재무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III. 해외 기부

Q6. 해외로 기부금을 보내는데 얼마나 우호적인 환경인가? 4.0

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국경을 넘는 자선 현금 및/또는 현물 기부금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나 세금이 없다.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즉시 세무당국에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즉시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테러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 특히 북한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된 몇몇 선택된 국가들을 제외하고 국경을 넘는 자선 기부금을 보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 기부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지정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로 해외 기부 지원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 기부자나 법인은 국세청에 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PO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단체에 총 100억원 이상을 증여하면 개인이나 법인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Q7. 해외에서 기부금을 수령하는데 얼마나 우호적인 환경인가? 4.5

국경을 초월한 자선 현금 및/또는 현물 기부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세금 또는 승인 절차가 없다(관세법 제91조). 테러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 북한 등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 국경을 초월한 자선기금을 받는 데 제약이 없다.

IV. 정치 환경

Q8. 정치 환경은 필란트로피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3.7

일반적으로 정부와 PO 부문 간에는 갈등이 없다. 정부는 정책 개발과 실행에 PO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 PO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 기업 등 여러 유형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 중 일부는 비즈니스 부문과 비영리 부문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시민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예: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위원회 발족). 동시에, 국회는 특히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자선 기부와 관련하여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국의 비영리 부문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치 않게 PO와 비영리 단체의 성공에 다소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유도한다.

Q9. 공공 정책 환경은 필란트로피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4.0

일반적으로, 정부는 나눔 문화의 전통을 장려하고 특히 PO의 훈련, 네트워킹 기회 및 자금 출처의 다양화를 지원하는 법을 통해 PO가 자원과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효과적인 부패방지법과 프로그램들을 시행했다. 정부는 개인이 기부금을 자선적으로 사용하는데 규제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PO의 투명성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정부 시행(예: 2018년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PO 투명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증폭시킨다. 또한 개인과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의 고질적인 상한선은 한국에서 자선 문화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9년 12월 공익법인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익법인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 기준은 총소득 50억원 이상, 기부금 20억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센터가 설립되었다.

V. 경제 환경

Q10. 경제 환경이 필란트로피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3.0

한국의 PO부문의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다소 불안정하고 불충분했다. 비록 나눔 문화가 한국 사회에 널리 뿌리내렸으나, 자선적 기부는 공적 필요를 위한 PO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

하지는 못했다. 기부금 총액은 지난 5년 동안 약간 감소했다. 2015년 이후 기업 기부는 줄었다. 2019년 COVID-19 발생 이후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요동쳤고 한국의 비영리 부문은 재정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주요 PO보다 소규모/풀뿌리 조직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 심각했고,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직보다 많은 모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기부자들은 풀뿌리 조직보다 많이 알려진 조직(또는 주요 PO)에 기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

VI. 사회문화환경 4.0

전통적인 한국의 기부문화는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종교적 유산이 강하다. 특히 한국인들은 지역사회와 친인척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을 내어주는 상호부조의 전통이 있다. 한국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식민지화, 한국전쟁, 독재, 산업화, 도시화 등의 경험으로 인해 전통적인 나눔문화 정신은 점차 시들해졌다. 그러나 증가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와 최근 시민 사회의 성장은 한국 사회가 역사적인 나눔의 전통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했다. 시민사회, 시민운동,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역할과 연립, 연대, 호혜 등 핵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되살아나 필란트로피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필란트로피 문화에 대한 서구적 인식이 증가했다. 기빙코리아에 따르면, 2021년 기부참여율은 21.6%, 평균기부금액은 58만 8천원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낮았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기부 총액의 증가율은 약간 감소했다. 최근의 회계 부정과 PO와 관련된 재정 스캔들은 한국의 나눔 문화 성장을 약화시켰다.

VII. 필란트로피의 미래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선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요 최근 사건

1. 초대형 기부자와 벤처 자선가들의 증가
2. 대규모 기부금의 오남용을 둘러싼 스캔들
3. 주요 비상사태(한국 2019년 대형 산불, COVID-19 등)에 따른 재난 발생

필란트로피의 미래 발전 동향

한국의 자선사업은 크기와 규모를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기부금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기부자 수는 증가했다. 새로운 기부 수단(크라우드 펀딩, 고액 기부, 유산기부 등)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다. 이는 필란트로피 저변이 확대되고 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와 PO의 관계는 과거에 보완적 또는 보충적 관계였다. 그러나 이 관계는 특히 2016-2017년 촛불 혁명 이후 적대적인 모델로 변화되었다. 현 정부가 모금과 자선 기부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한 수준의 정부 규제를 마련했지만, 선행 연구들은 자선 기부와 자원봉사가 한국 사회에서 더 발전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로 보인다고 강조한다.

VIII. 코로나19와 필란트로피

COVID-19 대응에 비영리 부문과 자선 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민첩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대응을 인정받았다.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진행과 방역을 모니터링하면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시민사회가 자원과 투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한편,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과제 및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중심적이고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 업무는 시민사회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이 진행되지만, 시민사회는 공청회, 전문가 회의, 협의회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결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시민들이 방역 규칙과 지침을 성숙한 태도로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제도화된 준법정신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은 정부 정책의 집행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감에서 자발적으로 이 규칙을 지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연대의 지지로 이 세계적 유행병 하에서 위협에 처한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예의를 반영한다.

COVID-19 대응과 관련된 비영리 부문 및 필란트로피의 혁신과 새로운 동향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자선 기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역사회 기반 모금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대 자선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약 1,129억 원을 성공적으로 모금했고,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마스크 2,230만 개, 손 세정제 170만 개를 기부했다고 보고했다. 이 금액은 주목할 만하며, 지난 30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코로나19가 필란트로피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다차원적으로 전례 없는 차질을 겪고 있다. 한국의 PO들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일부 수입이 감소했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보이는 한국의 비영리단체는 이 부문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특히 국내 PO들의 개인 기부 감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대중 인지도가 높은 대형 PO들이 소규모 PO들보다 더 많은 자선 기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COVID-19가 필란트로피 환경에 미칠 영향

한국의 비영리단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성에 있어 전례 없는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영리단체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리더들은 대체 예산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새로운 장단기 계획을 파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IT 옵션은

COVID-19(예: 동기식 온라인 상호 작용) 하에서 더욱 최적화되었지만, 비영리 단체는 또한 그들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탐구했다.

참고자료

- Kim, S. J. & Jang, Y. J. (2021). Estimate of philanthropic behaviors and attitudes in South Kore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 Kim S. J. & Jeong, B. (2021). COVID-19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vailable at: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21/03/30/covid-19-nonprofit-organizations-south-korea>
- Jeong, B & Kim, S. J. (2021).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ollaboration against COVID-19 in South Korea: A Single or Multiple Actor Play? *Nonprofit Policy Forum*. Volume 12(1), pp.165-187. DOI:
<https://doi.org/10.1515/npf-2020-0051>
-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Volume 4(6), pp.1-71.
- The Beautiful Foundation (2017). 문재인정부 10대 과제 중 나눔 관련 정책 리뷰 Available at: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17/09/14/>
- Park, M. H., Ryo, Y. H., et. al. (2020). 2020 Mega Giving Trend. Available at:
https://s3.amazonaws.com/uww.assets/site/Publications/Community_Chest_of_Korea_2020_Mega_Giving_Trend.pdf
- Ryo, Y. H., Park, M. H., et. al. (2019). 2020 기부 트렌드: 지나간 10년, 다가올 10년 Available at:
https://drive.google.com/file/d/1Km9rxKzHCfhPfprP_9lMsZLmg5Zk_LkO/view
- 국세청.(2021) 국세통계연보
-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Available at: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4798>
- 한국가이드스타. (2017).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